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진석 의원	소속	평창군의회
답변자	평창군수 (환경복지과장)	일자	질문 : 1999년 11월 9일 답변 : 1999년 11월 15일
회의	제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		
<p><질문요지></p> <p>○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 및 영세민 자립기반 지원노력 및 성과는? ○ 복지시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은?</p>			

<답변요지>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 및 영세민 자립기반 지원노력 및 성과

1. 공공근로사업 추진

- '98년도에 연인원 3,170명이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등 8개사업에 참가하여 총 127,000 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어 경제 위기에 따른 실직자와 영세 농어가의 근로기회 제공 및 최소 생계비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 우리군의 특성상 실직자가 많지 않아 주로 영세 농가 및 저소득층을 엄정 심사하여 선발, 지역의 공익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집중 배치하여 읍면별 지도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및 사업장별, 개인별 일일 작업 목표량 부여를 통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특히 98년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실직자 및 영세 농어가에 일자리 제공은 물론 영세민이 다소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훈훈한 사회기풍조성에 일조한 보람있는 사업이었습니다.

○ '99년도에는 3/4분기 현재 연인원 21,430명이 행정 전산화, 상수원 보호 구역 정화 작업 등 11개 사업에 참가하여 648,000 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어 많은 실직자 및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지원에 큰 보탬을 주었으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초등학교 급식인력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비용과 수고를 경감함은 물론 학교 급식 운영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특히 단계별 실 참여인원 764명의 12.2 %인 93명이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며 농업등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게 된 인원도 60여명이 되어 공공근로 사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0년도에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 실직자 및 저소득 영세 가구의 근로 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 생활보호사업 추진

○ 불우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 연간5,000천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화재 발생시 500천원의 생활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9 11월 현재 4가구 2,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 연간 1,677,237천원의 예산으로 거택보호자 746가구 1,251명에게 등급별로 54,330원~152,13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한시생계 보호자에게는

가구원수별로 79,000원~152,13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동안(1~3월,10~12월) 79,000원~152,130원씩 지원, 영세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로사업 추진

-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의 생계 보조를 위해 연간 134,107천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6,700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장애인 자립 지원

-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99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000원씩 연간 64,8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자립장 운영에 분기별 4,000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현수막제작용 기계를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이웃 결연·후원사업

-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기관단체, 독지가와 후원사업을 전개 총214가구(독거노인148, 소년소녀64, 미인가시설2개소)와 결연을 맺어(기관,단체, 군청각실과, 독지가 및 공무원 개인 등 158명) 12,273천원 상당의 현금및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빨래, 청소, 김장 등 가사일을 도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3.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및 생활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실직자 및 영세민가구를 포함, 저소득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 군민의 탈 영세민화는 물론 군민 전체의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복지시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1. 예산상 제약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사회적 복지 수요 증가 및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 수요의 증가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해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생계 유지나 자립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복지 사업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계유지에 충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족

- 현재 3개면을 제외하고는 일반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행정 업무를 겸하다 보니 중 장기적, 지속적 복지 시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3개 읍면에만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군청 및 전체 읍면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여 현재와 같은 단순 급여 제공 기능에서 탈피하여 전문성을 제고, 사회복지 시책 개발 등을 통해 사회복지 사업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처우 개선 및 각종 교육이나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점점 세분화, 다양화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